전국학생행진 팜플렛
보궐선거 특집 Ⅲ

빚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빚으로 짓는 가덕도신공항으로
당신의 표를 가져가겠습니다!

글03

: 빚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빚으로 만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당신의 표를 가져가겠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7.8%, 아마 투표할 것은 15.7%로, 약 93%가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구도는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 운영'입니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약 50%, 국정안정 운영이 약 30% 정도로 선택받았다고 합니다.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 운영, 각각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선거 키워드입니다.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 운영이라는 키워드 모두에게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선거를 이해해야 할까요? 행진에서는 그 키워드가 '국가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모두 국가부채를 더 늘리면서 하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정말 걱정해야 하는 수준인지, 특히 20대 청년들이 정치 세력을 판단해야 하는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뤄보려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빚을 내서 하는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가

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4차 재난지원금'의 쟁점을 정리하고 행진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채, '국가'가 지는 빚이니 괜찮다? 갚는 것은 모두 미래세대인 청년의 몫

노동자 A가 있습니다. A는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나가 돈을 법니다. 이 돈은 보통 노동자 A의 수입이 되고, 주거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있습니다. 만약 지출이 수입보다 커진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A가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국가의 수입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수입을 얻고, 각종 국가가 유지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과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세금'으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 세금으로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싶다면 국가는 빚을 내서 지출해야 하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로 국가가 채권을 팔아 돈을 빌리는 것이 국채입니다. 국채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자만 잘 갚으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정부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발행한 국채를 갚고 새로 시작합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재정적자, 경제성장률, 이자율이 국채 발행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적용해본다면, 한국 정부가 채무를 늘릴 때 고려해야 하는 제약 조건은 1) 성장률과 금리 2) 민간저축 3) 해외금융기관입니다. 한국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국채 발행에 대한 조건으로 민간저축이 지속 되어야 하며, 해외금융기관들이 한국 국채를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매입해줘야 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국채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부도를 내면 파산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차압해 가는 것과 다르게, 국가는 부도를 내더라도 재산을 차압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는 돈을 빌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다만, 국가부채가 과다하게 커지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신용도는 하락하기 쉽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그 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라 투자와 생산이 침체되면서 나라 경제의 고용도 위축됩니다. 또한, 과도한 민간의 부채가 정부로 이전되어 정부 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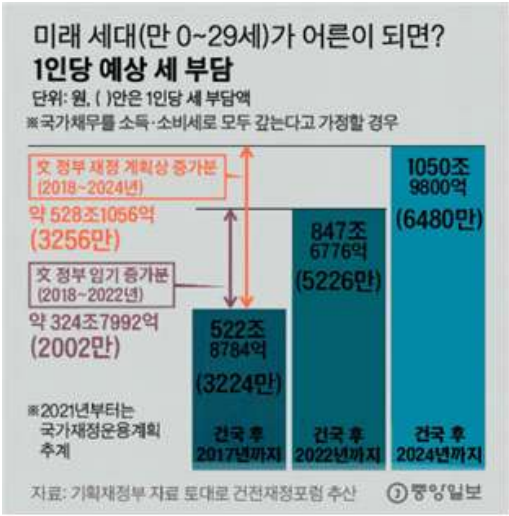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는 규모는 얼마이고 국가부채의 적절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인지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경제력이 상이하므로, 절대적인 액수보다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40%가 심리적 적정선으로 많이 이야기되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규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

견이 있으며, 부채를 활용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도 분명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우려해야 할 정도로 빠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총예산 558조 원의 약 5분의 1은 빚(적자 국채 94조 원)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늘어날 나랏빚을 갚기 위해 미래세대가 내야 할 세금(1인당 2002만 원)은 건국 후 현 정부 임기 말(2022년)까지 75년간 쌓인 국가채무에 대한 미래세대 부담(1인당 5226만 원)의 38.3%에 이릅니다. 기존에 쌓인 빚까지 더하면 이들 미래세대는 52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채로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빚을 내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생산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쓸 때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선거 승리나 지지율 확보를 위해 발

행하는 국가부채가 가장 질이 나쁜 부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겠다면서, 적자 국채 9.9조를 발행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각종 건설 사업도 남아있습니다. 만약 증세하지 않는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언제든지 다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국가부채 확대에 대한 별다른 경계가 없습니다.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재난지원금을 4번이나 지급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으로 이루어지면서, 생계보조 정책이라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했고, 수요 진작 정책이라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약했고, 중산층은 원래 하려던 소비를 대체했을 뿐이었습니다. 선별적 지급으로 이어진 2,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노동자 고용 긴급안정지원금 등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규모로 누가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성장률과 미래세대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점 더 낮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GDP 증가속도가 점점 더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앞으로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

원의 2017년 공동연구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초가 되면 1%대로 떨어집니다. 2030년대부터는 0%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전부터 이미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세였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확장 재정, 즉 정부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고성장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 경기 침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효과적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성장이 담보되지 못하면 확장 재정은 일시적 효과만 가지며,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만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침체가 길어지면 적자가 또 다른 적자를 낳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세대 간 정의** 문제가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적자로 인한 혜택은 현세대가 누리면서 적자 비용은 후세대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늘어난 빚은 청년들이 노동하며 갚아야 할 빚입니다. 가파르게 솟고 있는 국가부채증가율만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미래세대를 위해 진정으로 베풀어야 할 정의는 빚으로 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연 올해 문재인 정부가 빚을 내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합리적인 정책이었을까요? 앞으로 빚을 내서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 가덕도 신공항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봅시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덕도는 부산광역시에 속해있는 섬으로,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당의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아주 간략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표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니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특별법 통과는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법률문제를 따지는 법무부가 모두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판했고 시민단체, 언론 역시 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청와대가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고 반대의견을 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자리서 사과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데 청와대만 진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프랑스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가덕도는 안전성·경제성 모두 최하위였습니다. ADPi는 가덕도 공항이 태풍·해일 등에 취약하고 바다를 메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다고 했죠.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되었고 당시 영남지역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의 합의하여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안전사고 위험, 침하 가능성, 환경 파괴, 경제성 하자 등 7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비도 부산시가 전망한 7조50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28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인천공항 사업비의 3배 정도에 이르는 '메가톤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안전성, 환경 침해 여부, 경제성 등에 대해 여러 논란과 반대가 있음에도 청와대와 부산시장 후보들은 '균형 발전', '동남권 메가시티 형성'이라는 명목으로 특별법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적절한 토론과 절차를 지키며 정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항 건설을 강행한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모델로 삼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4차례의 타당성 조사 끝에 영종도를 입지로 확정하고 이듬해 관련법을 제정했다는 점과 매우 비교됩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매표행위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고 주장했지만 정말 신공항 건설이 국가의 대계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노무현의 꿈과 부산 시민의 꿈을 이룰 수단이라고 가덕도 신공항을 강조하지만, 이전부터 행해져 온 경제성, 타당성 평가에서 받은 낮은 점수를 무시합니다. 낮은 평가 점수를 노무현에 대한 향수로 대신 메꾸며 시민의 행복이 곧 노무현의 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착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등 여당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노무현의 꿈과 문재인의 의지'이므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정책이 합리성, 민주성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향한 '지지'가 기준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특별법 통과의 비합리성과 반민주성을 강조하면서 매표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무조건 옳은 걸까? 올바르게 평가해보기

작년 처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어느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2,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당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너나 할 것 없이 공약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사설의 제목을 보면 비판적 의견이 많습니다. "선거 앞

두고 있다지만 이런 졸속 추경은 없었다(중앙일보).", "2주 만에 8조 원 뚝딱… 선거 앞두고 확 늘어난 재난지원금(동아일보)". '재난지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너무나도 필요해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왜 주요 언론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일까요? 취약계층과 코로나 피해를 지원해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재난지원'이라는 명분 외에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나라에 장기적으로 끼칠 영향이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윗부분에서 국가의 수입은 세금이고 세금으로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단기간에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한다고 짚었습니다. 세금의 원천은 시민들의 노동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채는 미래 세대들의 노동으로 빚을 갚을 것을 담보로 국가가 빚을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호황일 것으로 기대되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시민 일 인당 노동생산성도 늘어나니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미래세대가 노동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노동에 투입할 미래세대들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예산을 섬세하게 계획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진세 등 빚(국채) 말고도 다른 재정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성장 시기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재정이

필요한 곳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 것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지원금을 평가해보려 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및 기존(유사)사업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분야	사업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변경안)	2·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중 동일(유사) 사업	제2차재난지원 프로그램 실집행률	제3차재난지원 프로그램 실집행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35,046	소상공인새희망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	83.5	93.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	456,277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7.4	75.5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6,000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98.4	94.6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30,900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0.1
	한시생계지원금	406,60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3.4	-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	203,280	고용유지지원금	100.0	17.9
	국민취업지원제도	120,253	국민취업지원제도	-	1.7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52,000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14.7	-
	희망근로 지원사업	213,026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72.4	-
방역 대책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373,117	코로나19 백신 구매	27.2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50,000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31.5

주: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실집행률은 2020. 12. 31. 기준,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실집행률은 2021. 2. 15.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월 25일 국회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15조 원 규모이고 그중에서는 9.9조 원은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의 표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전 재난지원프로그램과 겹치거나, 아직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돌봄 노동자 지원, 돌봄 비용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2차~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도 현황]

구 분	2차	3차	4차
지급시기	2020년 9월경	2021년 1월경	2021년 3월말(예정)
지원대상(계획)	294만개	280만개	385만개
재정소요	3.3조원	4.1조원	6.7조원
지급단가	100~200만원	100~300만원	100~500만원

[2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 현황]

구 분	2차	3차	4차
지급시기	2020년 9월경	2021년 1월경	2021년 3월말(예정)
지원대상 (계획)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법인택시기사: 10만명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법인택시기사: 8만명 · 돌봄서비스종사자: 9만명	· 특고·프리랜서: 80만명 · 법인택시기사:8만명 · 돌봄서비스종사자: 6만명
재정소요	0.7조원	0.5조원	0.6조원
지급단가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50만원 · 법인택시기사 -100만원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50만원 · 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70만원 · 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3.3

조 원-4.1조 원-6.1조 원) 다른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 돌봄 노동자의 지원 규모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0.7조 원-0.5조 원—0.6조 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지원대상의 만족도, 폐업 여부 등 '사업 효과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을 선별해 지원 효과를 높일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필요한 곳과 제대로 된 사용 여부 감시 외에도 미래세대에게 오는 부담을 점검해봅시다. 이번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로 인해 기존 계획보다 재정적자가 약 15조, 국가채무가 약 10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중장기 재정 계획과 재정 확충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만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을 찾아 지원 요건과 절차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지출 속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계획(ex. 세수 확충)을 마련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뒤엎으면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과 토론 없이 갈등으로 치닫는 정치 구도를 비판하자.

명분은 번지르르하지만, 비합리적이고 경제학적 기준이 없는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다들 명분을 내세울 뿐, 실제 효과는 적절한지, 합리적인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모든 절차와 기존 결정을 뒤엎고 '노무현의 꿈'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재난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효과와 지급 기준에 대한 검증 없이 일단 빚을 내고 보자는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습니다.

선거 시기에 등장하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국가의 재정, 다시 말해 국민이 낸 세금을 들인 사업으로 국민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이슈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모두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지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누가 차악인가를 가르는 선거가 아니라 누굴 뽑아도 최악인 선거에서 미래세대로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봅시다. 그 목소리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국민의힘도 빼고' 입니다.

〈참고자료〉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한지원, 2021, 한빛비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들, 사회진보연대, 20,10,07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048

연구보고서 19-17 국가부채 현황 및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2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이투데이, 21.03.02 (검색일 21.03.31)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0031

문 정부가 늘린 나랏빚, 미래세대 1인당 세부담 2002만원, 중앙일보, 20.09.03. (검색일 21.03.10)

https://news.joins.com/article/23863354

과다한 국가부채는 경제성장의 장애물, 이승훈, KDI 경제정보센터, 13.01.29 (검색일 21.03.31)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908